■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임시회 개회 쟁점은

시의회 총인시설 심사 위원 해촉 논란
도의회 F1 추경 예산안 적절성 도마에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오는 8일과 10일 각각 제260회, 제199회 임시회를 연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하수 오염물질 제거시설인 총인(總燐)시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집행부의 심사위원 해촉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며, 전남도의회에서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적절성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20011년도 광주시 및 시 교육청에 대한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의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상임위에서 심사·통과된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안 심의도 열린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특히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10일 긴급 현안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수 오염물질 제거시설인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해촉 배경 등에 대해 질타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밖에 ▲광주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20여 개 조례안과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광주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가칭)광주 학생 임해수련원 설립동의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는 8일 제 260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전남도 여성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해에 견줘 10% 상승한 중계권료와 경주장 건설을 위해 끌어들인 PF 대출금 1980억원에 대한 이자(3개월분)등을 포함한 328억원의 F1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전라선철도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 철회와 KTX 개통에 따른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축소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및 '2011년 F1대회 신용장(L/C)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 변경 동의안' 등도 처리한다.

의원들은 이외 공석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별로 자료수집과 현장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潘 총장 "강한 유엔 건설하겠다"

연임 출사표, 미·중 등 주요국 지지… 북한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일 오전 11시30분(이하 현지시각) 공식적으로 연임 출사표를 던졌다.

반 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중적인 범세계적 위기속에서 유엔이 직면해 있는 여러 현안을 완수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지지해 준다면 영광된 마음으로 5년 더 이 위대한 기구를 이끌고 싶다"고 연임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반 총장은 또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보다 강한 유엔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나의 슬로건"이라며 기후변화 의제 선도, 미얀마·아이티·파키스탄 위기 대처 및 최근 '아랍의 봄'에 대한 대처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변화속의 통합'(unity amid change)을 미래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무총장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안보리는 빠르면 금주중 반 총장의 연임 추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 하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총회에서 반 총장의 연임이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유엔 관계자는 "지금까지 반 총장에 맞서겠다는 도전자는 없으며, 반 총장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전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연임이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의 연임 도전 의사 발표 직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은 앞다퉈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시아그룹 53개 회원국들도 반 총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 대사도 반기문 총장의 연임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영화의 한 장면인가 6일(현지시각) 칠레 남부지역에 위치한 푸예우에 화산이 폭발한 가운데 솟구치는 화염재 구름 주변에서 번개가 치고 있다. 푸예우예 화산이 지난 4일부터 폭발 시작함에 따라 칠레 당국은 인근 주민 35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연합뉴스

'총인' 시의회-집행부 갈등 비화

홍인화, "간부 공무원 막말" 시장 사과 요구

광주시가 하수오염 물질 제거시설인 총인(總燐) 시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심사위원 해촉 논란이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심사위원 해촉의 부당함을 지적한 시의원이 특정 간부공무원이 막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강운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총인 시설' 심사위원 해촉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는 특정 간부공무원의 시의원에 대한 폭언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의회 경시' 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우려된다.

광주시의회 홍인화(민·북구 4)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인 시설 시공사 선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공무원 해촉과정에서 해당 업무와 무관한 고위간부가 개입됐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해당 간부가 전화를 걸어와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케 하는 언사를 퍼부음으로써 시의원을 협박하고 시의회 활동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해당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간부는 '자기를 음해하니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험한 언사로 10분이 넘게 의원을 협박했다"라며 "제보에 따라 보도자료를 통해 익명으로 해당간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해당 간부가 제보자와 3자 대면을 요구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강 시장의 사과와 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홍 의원이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내가 심의위원 해촉과 연루된 것처럼 말한 데 대해 너무 억울해 항의차원에서 설명을 했다"며 "당시 통화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경어체로 깍듯이 대했는데 겁을 주고 협박을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15 남북공동행사 보장해야"

박주선·김선동 의원 촉구
현인택, 올 기념식도 불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김상근 상임대표는 7일 6·15 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해 15일 개성에서 열고자 하는 남북 공동행사를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15 민족공동행사는 2001년 시작돼 민간 차원의 행사를 넘어 남북 당국간 중개 역할을 하며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일궈왔다"면서 "그러나 이 정부가 최소한의 민간교류마저 차단한 결과 민족공동행사는 3년째 단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민간교류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민간의 지혜를 남북관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성숙한 자세를 통해 정상회담 추진의 진정성을 보일 때"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비밀리에 대북접촉을 하면서 돈으로 위장된 사과를 하는 이명박 정권은 이제 국민의 불신을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MB 정부가) 10·4선언만 제대로 지켰다면 한반도 평화의 파괴, 단절된 남북관계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 몰래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9일 열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현 장관이 행사를 주최하는 김대중평화센터 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지만 일정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장관 대신 엄종식 차관이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축사 등은 하지 않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비자금 의혹 박찬구 회장 3차 소환

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등 4명 검찰에 고발

비자금 조성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7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세번째 출석해 약 7시간3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5시2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회장은 검찰 조사 내용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 조사를)잘 받았다.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

박 회장은 또 이날 오후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고발한 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하고서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3일과 4일 박 회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과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등의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9년 6월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 100억원대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그룹 주요 계열사 팀장 50여명을 모아놓고 자신이 쓴 메모를 보여주며 결백을 강조하는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금호산업 주식 매각도 독립경영을 위한 조처였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호석화는 이날 오후 3시께 김성채 대표이사 이름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금호석화는 고발장에서 "2009년 6월1일 금호그룹과 산업은행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기 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금호그룹이 약정 체결 전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면 산업은행을 속인 것이고 산업은행이 이를 알고도 약정을 체결했다면 양자가 공모해 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로 박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냈다. 조사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